

전교조 교사, 여전히 불온한 교사입니까

교육의창

노영필

교육평론가



1989년, 전교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결성되자마자 문교부(현 교육부)는 강경 대응에 나섰고, 1527명의 교사들이 일괄 해직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이후 전후로 진행된 사직 강요, 징계, 해임 등의 조치까지 합하면 희생된 교사는 약 1700여 명에 이른다. 이들은 단지 교육의 민주화, 인간화된 학교, 통일된 조국을 꿈꾸고, 학생과 교사가 존중받는 사회를 원했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쫓겨났다.

그 시기 정부는 전교조를 불온단체로 규정했고, 교육부는 전교조 교사를 식별할 수 있는 15가지 항목을 배포했다. 1989년 6월 7일자 동아일보는 그 내용을 인용하며, ‘존치를 받지 않는 교사’, ‘학생들에게 비판적으로 사고하라고 가르치는 교사’, ‘지나치게 열정적으로 수업하는 교사’ 등이 전교조 교사로 분류되는 기준으로 소개되었다. 국가권력은 ‘올바른 교사’를 구별한다며 감시와 배제의 논리를 펼쳤고, 결국 수많은 교사들이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교단을 떠났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흐른 뒤, 진실화해위원회는 전교조 해직 사태를 국가폭

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역시 국가의 과오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권고했다. 피해자 다수는 복직이 아닌 ‘특별채용’ 방식으로 교단에 돌아왔는데, 이는 명백한 원직복귀가 아니었고, 가해자인 국가가 사실상 ‘시혜’를 베풀 듯 행한 조치였다. 이들은 복직 이후에도 급여 보전은커녕 경력과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채 교직생활을 마무리해야 했다.

최근 이주영 전 교사의 민사소송 1심 판결은 문제의 본질을 다시 드러냈다. 이 교사는 전교조 활동을 이유로 부당하게 해직되었고, 특별채용 형식으로 교단에 복귀했다. 그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인권침해 결정에 따라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위자료 1700만원만 인정하고 해직 기간 동안의 임금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미 두 차례 국가기관이 인정한 불법 해직의 피해를 사법부는 외면한 것이다.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도 실질적 배상은 하지 않는 이 판결은, 피해자를 두 번 고통스럽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문제의 핵심은 ‘특별채용’이라는 용어에 있다. 이는 잘못된 국가 정책에 의해 해직된 교사를 본래의 자리로 되돌리는 복권이 아니라, 새롭게 뽑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는 뜻이다. 피해자는 여전히 자신의 경력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했고, 임금과 경력 손실도 그대로 떠안아야 했다. 법원은 이를 정당한 절차라고 판단

했지만, 이 논리는 과거 잘못을 지금의 법 잣대로 정당화하는 궤변이다. 정의는 단순히 절차적 정당성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에서 실질적 회복이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은 단순한 과거사 정리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회복이고, 교육의 정의를 세우는 출발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가는 책임을 인정하는 척만 했고, 사법부는 이 책임을 구제적 실천으로 연결하는 데 실패했다. 이제는 제도적 결단이 필요하다. 진화위 권고를 법률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해직교사들의 경력·급여 보전과 명예 회복을 명시해야 한다. 사법부 역시 진화위 판단을 판결의 실질적 근거로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피해자는 국가의 공식 사과와 함께, 손해에 대한 전면적 배상을 받아야 한다.

오늘날의 교육 현장은 여전히 위기 속에 있다. 아이들은 입시경쟁에 지치고, 교사들은 행정과 통제에 시달리고 있다. 인간화된 교육, 민주적 공동체로서의 학교는 아직도 멀기만 하다. 전교조 해직 사태는 단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떤 교육을 지향하는지 묻는 질문이기도 하다. 피해자들의 고통이 방치되고 왜곡된 채로 남는다면, 민주주의는 그 기초부터 흔들리게 된다. 교육의 정의가 회복될 때 비로소 사회의 정의도 바로 설 수 있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미국 텍사스 내륙 지역에서 내린 폭우로 5일(현지시간) 커빌의 과달루페 강둑에 주택과 자동차가 파손되어 있다. 텍사스주 중부 지역 커 카운티 등에서 발생한 홍수로 인한 사망자는 51명으로 늘었다. 국립기상청(NWS)은 추가 폭우와 급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민들에게 고지대로 대피할 것을 권고했고, 중부 지역에도 홍수 주의보와 경보를 발령했다.

AFP 연합뉴스

서석대



지난 3일,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의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이 열리던 무안. 회견 후 전남도교육청의 정책국장과 환담을 나누던 자리에서 ‘고려인’ 이야기가 나왔다.

문득 수년 전, 12편에 걸쳐서 마감했던 기획이 떠올랐다. 해당 기획은 고려인들이 숙청 당해 중앙아시아로 쫓겨났던 디아스포라의 길을 따라가며 그들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것이었다. 취재는 생각보다 힘들었다.

제법 괜찮은 기차 칸에서 하루 세끼를 다 먹을 수 있었음에도 최종 목적지까지 걸리는 일주일의 여정이 너무나 길었다. 기차 벽은 새벽이면 얼음처럼 얼어서 이불이 소용이 없었고, 무엇보다 한국인을 보면 트집을 잡아서 뭐라도 털어내고 싶은 일부 러시아 공무원들의 행태가 짜증과 피곤을 유발케 했다. 허나 고려인들은 화물칸에서 짐짝처럼 실려갔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은 그때도 지금도 그야말로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곳에 버려진 고려인들은 땅을 파고 들어가 짐승처럼 겨울을 지냈고, 끝끝내 중앙아시아에서 터를 잡는데 성공했다. 그들의 후손 중 일부는 공산당 간부가 돼 자신들의 조국은 러시아라 하기도 했다.

하지만 10명중 8명은 “내 조국은 꿈에도 그리던 한국”이

아픈 이름 고려인, 전남이 품었으면

라고 말했다. 그것은 1세대와 2세대를 넘어 3세대, 그리고 지금 10대인 4세대까지도 마찬가지였다.

대체 그들이 누구인가. 일제의 핍박을 피해 이주한 우리 조선인들이자, 독립군의 후손이기도 하다. 그 누구보다 조국을 사랑했고, 조국을 그리워 했으나 다시 가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버린 중앙아시아의 우리 핏줄이었다.

그 기획 연재를 마치면서 그들을 데려와 이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수년이 지나, 정책국장의 입에서 눈이 번쩍 뜨일만한 이야기를 들었다.

“아직은 계획중이지만, 인구 감소가 눈에 보이는 전남지역에 우리의 핏줄을 데려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물론 계획이겠지만, 그럼에도 말을 듣는 내내 심장이 두근거렸다.

멀어도 핏줄이다.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다. 더욱이 이들은 독립을 꿈꾸며 떠났던 이들의 후손이며 그 누구보다 한국인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다.

때가 되면 연어도 고향으로 돌아온다. 허나 그들은 돌아올 때가 한참 남았다. 이제 우리가 그들을 데려와야 할때다. 전남도교육청의 정책 계획에 큰 박수를 보낸다.

노병하 디지털콘텐츠부장 겸 사회부장

5·18 왜곡 처벌, 민주주의 지키는 첫걸음

허위 유포에 엄정한 법 적용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편향을 처벌하는 특별법이 시행된 지 4년 만에 본격적인 형사 처벌이 시작됐다. 최근 광주지검은 5·18 민주화운동을 편향한 9명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법 적용이 현실화된 모습을 보였다. 이는 수사기관의 기소와 사법기관의 유죄 판결로 이어지며, 5·18 왜곡에 대한 경고를 받아들이고 있다.

5·18 특별법은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들을 처벌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그동안 왜곡·편향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일부 세력은 지속적으로 5·18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려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2021년 시행되면서, 악의적인 왜곡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최근 광주지검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들에게 5·18 특별법을 적용해 형사 처벌을 예고하며, 5·18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겪은 2차 피해를 언급했다. 인천지법도 지난해 7월 5·18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을 통해 5·18 시민군을 북한군으로 묘사한 고교생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같은 법 적용은 왜곡된 역사와 싸우고, 5·18의 진실을 지키는 중요한 첫걸음이다. 또한 5·18 기념재단은 “5·1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이라며, 그 역사적 진실을 지켜나갈 책임은 모두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해 5·18을 왜곡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5·18 정신을 계승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향후 5·18 왜곡과 편향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법적인 대응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민들 또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5·18 정신을 계승해 나가야 한다.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이 올바르게 후세에 전달될 수 있도록 모든 사회 구성원이 노력해야 할 때이다.

스쿨존 불법 주정차, 더 이상 방치해선 안돼

안전한 길 근본 해결책 필요

광주광역시 초등학교 주변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문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최근 3년간 적발 건수가 9만건을 넘었고, 6월 한 달에만도 1700건 가까이 적발됐다. 이는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가 여전히 일상화돼 있음을 보여준다. 운전자들의 단일한 인식과 열악한 주차 인프라, 물리적 안전시설 미비가 맞물린 구조적 문제다.

스쿨존은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하지만 서광초, 영천초 등 시내 여러 초등학교 앞에서 스쿨존 표시 위에 차량이 버젓이 주차돼 있는 실태는 시민 누구에게나 불편함을 넘어 불안을 안긴다. 주차 차량 사이로 통행해야 하는 아이들의 동선은 사고의 위험으로 가득하다. “잠깐이면 괜찮다”는 운전자들의 인식이 어린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자체는 CCTV 설치 확대와 단속 차량 운영, 시민 신고를 통한 과태료 부과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은 편이다. 불법 주정

차 단속은 반복적으로 이뤄지지만, 다음 날이면 다시 차량이 줄지어 서 있는 풍경이 반복된다. 단속 위주의 접근은 ‘풍선효과’처럼 장소만 옮길 뿐 문제를 뿌리째 해결하지 못한다.

더욱이 광주지역 상당수 스쿨존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구조다. 보행자와 차량이 뒤섞인 도로는 사고 위험이 높다. 단속 강화는 물론, 스쿨존 환경 자체를 물리적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 불법 주정차를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도로를 재설계하고, 보도블록 설치와 차단봉 등 물리적 장치로 보행 동선을 확보해야 한다. 스쿨존은 단순히 ‘속도를 줄이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의 생명이 보호받는 ‘약속된 공간’이어야 한다는 시민 인식 개선도 중요하다. “잠깐쯤이야”라는 생각을 버리고, “내 아이가 다닐 수 있는 길”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갖는다면 변화는 멀지 않다.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도시를 만들기 위해선 단속과 계도, 인식 개선을 넘어 도로 환경 자체를 안전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근본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은 행정만의 책임이 아니라, 모두의 의무다.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 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